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

2024. 9.

장 호 섭 의원

제안설명서

제안자: 장호섭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☐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」를 반영한 것으로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」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고, ‘재난취약계층’을 법령과 동일한 ‘안전취약계층’으로 정비하였으며, 정보제공 및 교육,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☐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(제명, 안 전반)하였습니다.
 - 재난취약계층 → 안전취약계층
-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.
-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7조에서는 제목 “(개선비용의 지원)”을 “(업무의 위탁)”으로 수정하였습니다.
- 안 제9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신설하였습니다.

☐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**

-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2024년 9월 12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☐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

- 본 조례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」를 반영한 것으로,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장호섭 의원 대표 발의】

의안 번호	0092408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12.

발 의 자 : 장호섭 도하석 권숙자
강한곤 이선주 박정환
황국주 김장관

1. 제안이유

- 이 조례안은 2019년 12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개정으로 신설된 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에 맞게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」를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고, ‘재난취약계층’을 법령과 동일한 ‘안전취약계층’으로 정비하였으며, 정보제공 및 교육,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신설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전반에 사용된 용어 정비(제명, 안 전반)
- 재난취약계층 → 안전취약계층
- 나. 목적과 정의를 법령에 맞게 변경(안 제1조~제2조)
- 다.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구분(안 제3조~제4조)
- 라.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을 신설(안 제4조제5호~6호)
- 마. 제목 “(개선비용의 지원)”을 “(업무의 위탁)”으로 수정(안 제7조)
- 바. 관계기관과의 협력 신설(안 제9조)

3. 일부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 · 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 따른 다문화가족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6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7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
8.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

제4조(중전의 제3조)의 제목 “(지원대상 및 범위)”를 “(지원범위)”로 한다.

제4조(중전의 제3조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”을 “안전취약계층의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
6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
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5조)제1항 중 “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개선비용의 지원)”을 “(업무의 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, 가스,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,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·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안전 환경 지원 신청서						
지 원 대 상 자	성 명		생년월일		세대원수	
	주 소			전화번호 (휴대폰)		
	대상자 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수급자, 차상위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다문화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		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년이 가장 <input type="checkbox"/> 홀로 사는 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담당공무원 확 인 란
지원 내용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 <input type="checkbox"/> 가스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
신 청 인		대상자와 관계	<input type="checkbox"/> 본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친족(관계:) <input type="checkbox"/> 이·통장()			
<p>「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」 제5조에 따라</p> <p>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.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 청 인 (인)</p> <p>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귀하</p>						

첨부서류	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예 :장애인 복지카드, 수급자 증명서 등)
------	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거나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</u>	<u>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</u>
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,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정의) “재난취약계층”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</u> <u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</u> <u>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</u> <u>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</u> 	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층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</u></p>

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6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
7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
<신 설>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
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6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

7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

<p>제3조(지원대상 및 범위)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4조 (생략)</p> <p>제5조(지원결정 등) ①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,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.</p>	<p>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</p> <p>8.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세대</p> <p>제4조(지원범위) 안전취약계층의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</p> <p>6.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제5조 (현행 제4조와 같음)</p> <p>제6조(지원결정 등) ① -----</p> <p>----- 구</p> <p>청장은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
---	--

<p>② (생 략)</p> <p><u>제6조(개선의 위탁)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, 가스,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7조(개선비용의 지원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제7조(업무의 위탁)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, 가스, 소방 등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9조(관계기관과의 협력)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련 전문기관,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·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.</u></p>
--	--

【 관계 법령 】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의3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1. 17.>
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
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 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 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39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3세 미만의 어린이
 2. 65세 이상의 노인
 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 4.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1.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·가스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
 2.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 3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 4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- [본조신설 2020. 6. 2.][중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<2020. 6. 2.>]